

이재명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우려”

윤 대통령 강경 발언 관련 “현실적인 문제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파업 강경 발언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한 명도 후퇴는 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은 문제 해결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3월에 과연 2000명을 거의 2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 파업은 옳지 않다.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한편으로 정부 역시 충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파업 강경 발언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물론)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이고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리스크를 줄여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의사들의 자발적 복귀를 호소했다. 조태근 기자

‘메가시티 서울’ 놓고 구리시의회 논쟁

신동화 “신중하게 진행해야” 김용현 “구리시민 68% 염원”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20일 구리시의회 제 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각 당의 입장을 쟁점화시켰다.

신동화 의원은 “서울 편입 문제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구리-서울통합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행안위에 접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5월 29일 임기도 종료될 21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 여야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백경현 구리시장은 행안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공개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현 의원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두 번에 걸쳐 발표한 성명서에 문제가 있다”며 “GH공사 구리 이전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인 점, 구리-서울 통합 주체는 구리시



메가시티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구리시의회 신동화(왼쪽) 의원과 김용현(오른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구리시의회)

장이 아닌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지역 의견수렴과 법안 제출 등 그 임무를 다하고 종료한 점, 통합할 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명시된 점” 등을 나열했다.

또한 “21대 국회 시한에 따라 특별법이 자동 폐기돼도 22대 국회의원의 의지로 재상정이 가능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며 “구리시민 68%가 염원하기에 시의회 의원 간의 논의와 주민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법률적인 의무를 다하자”고 제시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한 김용현 의원은 민주당 소속 권봉수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 직후 의장은 ‘발언 취지와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를 해야겠다’고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토 후 허가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며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형실 기자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경제정의실천연합,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후퇴... 중단”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양당이 지난 21대 총선 이후 다시 한번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 기회를 주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에 반하는 처사로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위성정당은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며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경실련)

하고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로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빌미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 이제는 선거제도를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를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대양당

의 기득권 유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양당이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야 하며 22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또 군소정당들은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시 한번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와 군소정당들의 위성정당 참여 거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전망

일산대교 일단 동결될 듯 경기도의회서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해당 안전에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하반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도로는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일산대교는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동결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

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전을 다시 제출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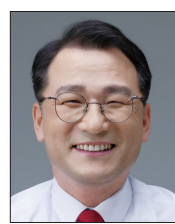
충선출사표

인천 남동을 당협 당직자 ‘한마음’

신재경 예비후보

인천 남동을 당협 전 당직자 및 전·현직 시·국회의원이 20일 신재경 예비후보(국민의힘 인천시 남동읍,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사진)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신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주요 인사들은 국민의힘 남동을 당협을 이끌어온 이화복 교수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현 인천시의회 이인교 의원, 현 남동구의회 이용우·이유경·전유형·전용호 의원과 전 인천시의회 원현철 의원, 전 남동구의회 신현필·임순애 의장을 비롯한 최경복·이기윤·



김대진·국종일·손진원·김상호·이용길·서정수·임동희 의원 등 및 지역 원로, 핵심 당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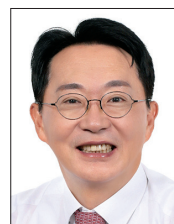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신 예비후보가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인천에서 성장했고, 정당과 국회를 거쳐 대통령실 등에서 요직을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남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까지 일치단결해 신 예비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결의를 다졌다. 박근식 기자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진행 지원

김현준 예비후보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수원시 재개발·재건축공동협의회 이장재 회장(재건축) 및 관계자들과 만나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신속한 사업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재건축협의회 관계자들은 “1·10부동산 종합대책 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수원시의 소극행정 등으로 현장 속도감은 볼만스러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장안구 원도심의 핵심현안이 주거환경 개선이다. 한국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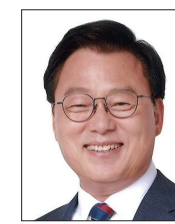
주택공사 CEO의 경험과 실력으로 노후 도심 재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관계부처와 수원시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요구·지원해서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도심복합사업 등을 신속 지원해 원도심지원센터 설치를 수원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열 기자

매탄 신도시 건설 공약 발표

박광은 예비후보

민주당 박광은(수원정·사진)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매탄 신도시 건설과 영통지구 재건축 선도시구 지정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미래형 설계와 적용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개발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매탄과 영통을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은 매탄 주공 4·5단지 중심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50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희열 기자



먼저 박 의원은 매탄동을 ‘경기도 첫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을 통한 매탄 지하철시대 개막”과 함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지하철 연계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종합복지관 유지, 실내체육시설·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중학교 신설 등 매탄 신도시 비전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열 기자